

구글·페북 통신망 무임승차 ‘모르쇠’...역차별 해결 난항

과기부 국감 질의

글로벌 CPLTE 트래픽 67% 달해 망이용료 질의에 “기밀” 답변회피 네이버 등 韓CP, 연간 수백억 지불 합리적제도 마련 목소리 거세질 듯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업체들의 국내 통신망 망 ‘무임승차’ 논란을 두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정감사 첫째 주에서 구글, 페이스북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지만, 증인으로 출석한 글로벌 사업자들이 동문서답식 답변을 내세우거나 같은 말을 반복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기술어린 운동장’ 논란을 일으킨 해외 CP들의 망 이용료 역차별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 페이스북 등 글로벌 CP의 롱텀에볼루션(LTE) 데이터 트래픽이 차지한 비중이 67.5%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리 구글코리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의 ‘망이용료’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더불어민주당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TE 데이터 트래픽 상위 10개 사업자 중 절반 이상이 글로벌 CP에 해당됐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CP가 이동통신 3사의 LTE 네트워크에서 유발하는 일 평균 데이터 트래픽 합계는 5485테라바이트(TB)로, 상위 10개 사업자가 발생하는 전체 트래픽 8127TB의 67.5%다. 반면,

<이동3사 LTE 트래픽 발생 상위 10개 사업자 국내·외 트래픽 현황> (단위: 개, TB)

구분	SKT			KT			LGU+			총계		
	국내	국외	계									
사업자	5	5	10	5	5	10	4	6	10	-	-	-
트래픽	1,503	2,606	4,109	418	1,006	1,424	721	1,873	2,594	2,642	5,485	8,127
	36.6%	63.4%	100%	29.4%	70.6%	100%	27.8%	72.2%	100%	32.5%	67.5%	100%

1) 각 분기 중 특정 1주일 동안 LTE 트래픽 측정하여 평균한 1일 수치임.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내 CP는 2642TB(32.5%)에 불과했다.

이 같은 격차에도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 기업들은 연간 수백억원을 망 이용료로 지불하고 있는 반면, 구글과 페이스북은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 거의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 실정이다.

지난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리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CP 사업자들이 증인으로 올라선 이유다. 관련된 증언으로는 조리 구글코리아 대표와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가 나왔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망 이용료 회피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를 했지만, 명쾌한 답변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구글과 페이스북 증인 모두 “확인할 수 없다”와 “구체적인 사항은 기밀이다”라고 하는 등 회피

하기 답변으로 상황을 무마했다.

특히 조리 대표는 “망 이용료를 낼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질문에 “구글은 글로벌 네트워크와 인프라에 30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집행한다”며 “그 중 하나는 구글캐시 서버다. 이를 통해 망 사업자가 트래픽을 가져오는 대역폭을 줄이고 빠른 속도로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고 답했다. 글로벌 네트워크 투자를 통해 망 사업자에게 비용 절감 기회를 준다고도 덧붙였다.

망 사업자와 협의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사항은 기밀”이라며 “합의는 비공식적으로 이뤄진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결국 우회적으로 비용 절감 기회를 준다는 다소 ‘동문서답’인

대답으로 망 이용료를 내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셈이다.

오성목 KT 사장은 “구체적인 협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구글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페이스북 또한 최근 방통위와의 행정 소송 1심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며 ‘모르쇠’ 식 답변으로 일관했다.

페이스북은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1일 KT·세종텔레콤과 네트워크(망) 사용 계약을 완료했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보여주기식’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간 글로벌 CP들은 주요 계약 내용을 철저하게 비밀로 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무임승차 논란을 피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를 두고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연내 ‘망 이용 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국감에서 해외 CP 청문회를 별도로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해 앞으로의 대응방안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산업부, 1천억 펀드 조성... 소·부·장 지원

(소재·부품·장비)

기프트 2호 펀드 운용사 선정 공고 내달 선정, 내년 상반기 투자 개시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으로 1천억원 규모의 민관펀드를 조성해 기업들이 국내의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이나 회사를 사들이는데 도움을 주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1000억원 규모의 GIFT(기프트·Governmental Industrial Fund for new Technology & commercialization) 2호 펀드 운용사 선정 계획이 공고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기술이전, 공동기술개발, 인수·합병(M&A) 등 국내외 ‘외부기술도입(Buy R&D)’을 통해 신속한 핵심기술 확보를 지원함으로써 기업 성장전략으로 활용하도록 복돋우기 위한 것이다.

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

서 출자 설명회가 진행되며 10월 25일 제안서 접수 마감, 11월 운용사 선정 이후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개시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외부기술도입 등 ‘개방형 혁신성장을 통한 기술사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성장사다리펀드 등 금융권과 협업해 GIFT 펀드를 새롭게 조성한 바 있다.

GIFT 1호 펀드는 6월 1천40억원 규모로 결성돼 본격적인 투자가 진행 중이다.

이번 GIFT 2호 펀드는 주된 투자대상을 소재·부품·장비 기업으로 특화해 이들이 대체기술을 신속히 확보하고 공급선을 다변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0억원), 한국성장금융(150억원), 금융권(250억원 이상) 등이 출자 예정이다.

산업부는 지난 8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핵심품목 기술개발 착수, 실증·양산 테스트베드 확충 등을 추진해 왔다.

GIFT 2호 펀드 투자기업의 스케일업(성장) 자금 후속 지원을 위해 기술보증기금을 활용한 투자연계보증도 내년 지원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투자·보증 등 다양한 형태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투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후 선정되는 펀드 운용사에 부품 소재 전문기업, 신뢰성 평가 지원사업 참여기업 등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건수 산업혁신성장실장은 “한일 무역갈등 등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조속히 대응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도 자체개발 관행에서 벗어나 외부자원을 활용한 기술획득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



부산 산사태 복구 현장 방문한 김정숙 여사. 김정숙 여사가 6일 오후 부산 사하구 구평동 산사태 복구 현장을 찾아 복구작업 중인 구조대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청와대

과기부 13일까지 ‘소프트웨어 교육 체험주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2019 소프트웨어(SW) 교육 체험주간’을 7일부터 13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9 SW교육 체험주간’은 건전한 SW 교육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SW교육의 날(10월)’이 포함된 주간으로, 올해는 ‘글로벌 SW교육 콘퍼런스’, ‘온라인 코딩 파티 시즌2’, ‘SW교육 페스티벌’, ‘한국코드페어’ 등 각종 행사가 진행된다. 이 행사는 7일 밀레니엄힐튼서울에

서 개최되는 ‘2019 SW교육 글로벌 콘퍼런스’로 시작한다. 이 콘퍼런스는 한국·미국·일본·중국·인도·이스라엘의 전문가들이 각국의 SW교육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SW교육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중국 AI 교과서 집필을 주도한 천 주진 연사의 기조강연과 네이버·IBM·마이크로소프트가 기업의 SW·AI교육관점을 공유하는 특별 세션을 개최하고, 각국 전문가들의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채윤정 기자 echo@

중기부, 스케일업 금융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오는 7일부터 혁신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2019년 제2차 스케일업 금융’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스케일업 금융지원사업은 성장잠재력이 있으나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직접 금융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인수한 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P-CBO)을 발행한다. 유동화증권 중 선순위와 중순위 증

권은 민간에 매각하고 후순위 증권은 중진공이 매입할 계획이다.

이번 2차 지원에서는 전통 제조업 기업뿐만 아니라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본 수출규제 관련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기업과 스마트공장·핀테크 등 8대 선도산업 혁신성장 분야 중소기업에 집중 지원한다.

2차 스케일업 지원 선정 기업은 3년간 최대 150억원의 자금을 회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신용평가사 회사채 발행 신용등급 B+등급 이상인 중소기업이다.

/배한님 기자 ericabae1683@

과기부 추경지원 9개 교육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으로 지원되는 9개 교육과정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총 6300명의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실무 프로젝트 중심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해 4차 산업혁명 8대 선도 분야 실무인재로 양성하고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사업이다. 이번 추경예산 6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스마트공장 4대 분야 실무인재 300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채윤정 기자

법무부 불법 체류자 ‘자진출국 사전신고제’ 실시

법무부가 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 외국인인 해외로 도주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자진출국 사전신고제’를 실시한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출국 당일 공항만을 통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신고·출국제도를 폐지하고 사전에 출입국 등에 신고한 뒤 출국하는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를 도입한다.

법무부는 그간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발적인 귀환을 유도하기 위해 출국 당일 공

항만으로 바로 자진출국할 수 있게 하였던 ‘형원 어린이 뺑소니 사건’처럼 범죄를 저지른 다음날 공항으로 바로 빠져나가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국일 기준 3일~15일 전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해 자진출국신고서 및 여권, 항공권·승선권을 제출하고 심사를 거친 후에 공항을 통해 출국할 수 있게 된다. /손현경 기자 son89@